

## II. 협동조합 환경교육연구소

### 1. 연구모임 개요

연구 모임명	협동조합 환경교육연구소			
연구모임 목적	통합적 환경교육의 일상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지역 연구			
연구모임 결성일	2016. 1. 20			
연구모임 구성원 수	4명			
연구모임 대표자 (책임)	이름	차수철	핸드폰	
	소속 (직업)	광덕산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운동가)	e-Mail	csc@kfem.or.kr

### 2. 지원사업 활동 목적(지원금에 대한 사용 목적)

- ☐ 평생교육 전문가 초빙 간담회
  - 고령시대에 필요한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 평생교육 기관 방문
  -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인터뷰
- ☐ 충남 평생교육 정책 제안
  - 노인 대상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분석 및 제안
- ☐ 충남 환경교육 전문 연구 집단 발족
  - 충남을 근거로 하는 환경교육 전문 연구집단의 발족 모색

### 3. 지원사업 주요 활동 내용

#### 1) 월례 모임

- 총 모임 건수 : 6 회
- 목적 및 회의 주제
  - 1차 회의(4.11) : 연구모임의 목적 및 일정 구상, 업무 분장
  - 2차 회의(5. 9) :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 초빙 간담회
  - 3차 회의(6.13) : 충남 평생교육 관련 보고서 조사, 타 지역 사례 조사
  - 4차 회의(7.11) :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상
  - 5차 회의(9.26) : 평생교육기관 방문
  - 6차 회의(10.26) : 마무리. 보고서 작성

#### 2) 전문가 인터뷰

- 평생교육전문가 초빙 인터뷰 : 1회
- 대상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양병찬 교수
- 목적 : 평생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3) 기관방문

- 평생교육기관 방문 : 1회
- 기관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 목적 :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 4. 월별 활동 실적

#### 1) 2016년 4월

- 월례모임
  - 개요
    - 4월 11일. 17시. 공주대학교
    - 목적 : 연구모임의 목적 및 일정 구상, 업무 분장
    - 참석자 : 차수철, 최병조, 이병연, 김문옥
  - 주요 활동 내용
    - 충남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충남 평생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 고령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적 서비스 제공
-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의 결합
- 환경교육 협동조합 구성, 운영의 방향 논의

## 2) 2016년 5월

### □ 월례모임을 겸한 전문가 초빙 간담회

#### ○ 개요

- 5월 9일. 13시~15시. 공주대학교
- 목적 : 고령화 시대의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참석자 : 양병찬, 김문옥, 차수철, 이병연, 최병조

#### ○ 주요 활동 내용

- 평생교육의 문제 진단
  - ① 노인을 여러 계층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 ② 평생교육 부문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③ 노인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 바람직한 평생교육 방향 제시
  - ① 노인교육은 노인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②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 ③ 복지관, 교육센터 등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노인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 ④ 시민교육, 환경교육, 문화교육 등의 담당자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

## 3) 2016년 6월

### □ 월례모임

#### ○ 개요

- 6월 13일. 17시. 공주대학교
- 목적 : 충남 평생교육 관련 자료 조사, 타 지역 사례 조사
- 참석자 : 차수철, 최병조, 이병연, 김문옥

#### ○ 주요 활동 내용

- 충남 도민 평생교육 요구조사, 충남 평생교육 기초실태 조사, 충청남도평생교육백서, 충남통계연보 등 충남 평생교육 관련 문헌 조사
- 대전, 경기, 부산, 전남 등 타 지역 평생교육 관련 문헌조사

#### 4) 2016년 7월

##### □ 월례모임

###### ○ 개요

- 7월 11일. 17시. 공주대학교
- 목적 : 충청도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상
- 참석자 : 차수철, 최병조, 이병연, 김문옥

###### ○ 주요 활동 내용

- 고령사회, 개인의 삶의 질,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상
- 충청도민의 요구, 기존 평생교육의 한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상

#### 5) 2016년 9월

##### □ 월례모임을 겸한 기관방문

###### ○ 개요

- 9월 26일. 15시.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 목적 :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 참석자 : 강현정(연구정보팀장), 최병조, 이병연, 차수철, 김문옥

###### ○ 주요 활동 내용(주요 질문 내용)

- 평생교육프로그램 설계와 진행 과정
- 고령자에 대한 준비와 대응
- 개인의 지속가능성, 삶의 질에 대한 고려

#### 6) 2016년 10월 26일

##### □ 월례모임

###### ○ 개요

- 10월 26일. 9시. 공주대학교
- 목적 : 마무리. 보고서 작성
- 참석자 : 차수철, 최병조, 이병연, 김문옥

###### ○ 주요 활동 내용

- 고령사회,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 마무리. 보고서 작성

※ 사진 등 첨부



사진

## 5. 노인 평생교육 정책 연구 성과

### □ 충남의 노인비율과 노인의 삶의 질

-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이다. 충남의 노인 인구비율은 2014년 기준 2,116,830명 중 330,807명으로 15.6%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각 시군별로 나누어 보면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는 고령화사회이고, 서산시, 당진시는 고령사회이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초고령사회이다. 특히 청양군민 10명 중 3명은 노인이다.

<표 1> 충남의 인구분포(2014년 기준)

시군별(2014)	인구수(명)	65세 이상 인구(명)	노인 인구비율	고령화 정도
합계	2,116,830	330,807	16%	고령
천안시	614,880	52,610	9%	고령화
공주시	115,384	23,092	20%	초고령
보령시	106,702	21,817	20%	초고령
아산시	307,336	32,581	11%	고령화
서산시	170,920	26,187	15%	고령
논산시	128,077	26,997	21%	초고령
계룡시	40,713	3,446	8%	고령화
당진시	167,892	25,975	15%	고령
금산군	56,506	14,019	25%	초고령
부여군	72,800	20,078	28%	초고령
서천군	58,872	17,192	29%	초고령
청양군	32,761	9,976	30%	초고령
홍성군	93,634	20,006	21%	초고령
예산군	86,640	21,036	24%	초고령
태안군	63,713	15,795	25%	초고령

- 그런데 노인의 삶의 질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90.6명(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청양은 노인비율도 높지만 자살률 또한 매우 높은데 이것은 노인비율과 자살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
- 노인이 행복하지 않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
- 노인을 단순히 나이로 구분하고 하나의 연령집단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노인은 본인의 삶과 연계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나이가 아니라 사회경험, 경제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야 한다.

#### □ 충남의 평생교육

- 충남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 및 평생교육 필요성, 평생교육 참여도에 대한 도

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충청남도 평생교육백서』에 의하면 충남도민의 68.2%는 평생교육에 대해 잘 알거나 매우 잘 알고 있고, 91.4%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6.4%는 전혀 모르고 있다.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정책과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에 참여한 사람의 76.7%는 평생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여긴다. 특히 정신적 건강 또는 심리적 만족, 그리고 교양 함양이나 지식 습득 등 자기개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또한 평생교육 비참여자라 할지라도 교육을 받은 후에 삶의 만족도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평생교육 참여계획에 대한 조사에서는 84.3%가 꼭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 충남지역 노인과 평생교육

- 평생교육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설문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이고, 교육 참여 전과 후 삶의 만족도 변화가 가장 큰 연령대 역시 60대이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은퇴, 조기 퇴직자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이다.
- 평생교육 우선지원 대상에서 주부, 직장인, 실직자 등은 늘었지만 노인의 비율은 2012년 11.8%에서 2014년 5.4%로 크게 줄었다. 평생교육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다.
- 『2015 충청남도 평생교육백서』에 의하면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 등 계층별 역량개발을 위해 재교육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은 생애 전 과정에서 이뤄지며 개인의 삶의 질 개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 □ 영역 편중 현상

- 학습을 통한 개인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6대 영역별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의사는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학습을 통한 역량 증진에 대한 기대는 보통 수준 이상이다. 단위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생활문화, 예술문화, 사회문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이 개발 실행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시민참여영역인 공동체 의식, 시민의식 등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반성과 관련된

사회문화 역량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중 일정 비율을 시민참여영역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 평생교육원 등에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소일거리식인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 영역 43.8%, 인문교양 영역 26.8%, 시민참여 영역 1.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영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군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 보고서를 발간한 다른 광역 평생교육진흥원 몇 군데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현상이기니 하지만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문화예술 교육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시민참여교육 부분은 적다.

<표 2> 평생교육 영역별 분포(2014년. 단위 %)

구분	충남	대전	부산	전남
학력보완교육	9.3	1.4	8.9	1.8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2.7	1.4	1.7	11.8
직업능력향상교육	16.3	30.7	20.4	19.2
인문교양교육	26.8	25.2	32.8	25.0
문화예술교육	43.8	36.7	34.7	32.9
시민참여교육	1.1	4.6	1.5	4.3
기타				5.1
계	100	100	100	100

#### □ 환경교육과 지속가능성

-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며 ‘인간과 자연간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학습하여 실천하는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수준의 환경교육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학습자의 친환경적인 행동을 위해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식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지속가능성



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관과 환경 윤리, 환경의 구성, 환경 문제, 인간 활동과 환경 문제,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능은 환경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과 심미안을 기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며 환경에의 영향을 기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능력을 익히는 것이다. 가치 및 태도는 환경에 대한 심미안과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를 형성하고, 환경 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 환경교육은 환경오염행위를 막고, 환경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소양인의 육성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활동이다. 환경교육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이뤄내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환경교육이 지향하는 것으로 좁게는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 □ 평생교육 차원의 노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안

- 현재의 노인 정책은 대부분 복지나 건강차원에서 다뤄지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노인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나 노인정책, 노인교육은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이고 반추하며, 자기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생활 환경교육이고, 또 하나는 자연체험활동이다. 생활환경교육은 실천적 내용으로 쓰레기 종량제와 자원순환, 친환경생활제품 만들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다.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표 3〉 프로그램 제안 1 : 생활환경 교육

회차	내용	비고
1	생활용품과 수질오염, 친환경생활제품 만들기	마을회관, 경로당
2	자원순환과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마을회관, 경로당

-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줄고, 혈압이 내려가고 긴장이 이완된다고 한다.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의 삶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인류의 삶은 지속가능하고 그래서 자신의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 지역에 대한 이해, 계절의 변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 좋다. 지역의 가까운 명소를 다니며 진행한다.

〈표 4〉 프로그램 제안 2 : 자연체험 활동

회	내용	비고
1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인문사회환경, 자연환경)	실내, 실외
2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연환경	실내, 실외
3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된 생물 :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실외
4	농사와 종자 : 식량 전쟁, 씨앗 전쟁	실외
5	나무를 가꾼 사람들, 나무처럼 살아온 어르신(숲의 가치)	실외
6	자연에서 보물찾기	실외
7	절기와 세시풍속	실내, 실외
8	마무리. 직접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나누기	실내

## 6. 향후 과제 또는 충남연구원에게 바라는 점

### □ 노년층 활용방안 마련

- 노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할 전문 인력 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층은 생애주기 특성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 노령지식인을 활용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이나 경력, 전문지식 등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평생교육을 받는 노인 중에는 자기가 가르쳐야 할 사람에게 배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배움의 목적이 사교, 친교에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만 경제적 유인이 없거나 자원봉사가 문화화 되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
- 시민교육, 환경교육, 문화교육 등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활동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만나서 평생교육시스템과 결합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노인이 교육의 대상이며 동시에 주체가 되

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생과 노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좋은 사례(내포생태교육연구소)가 있다.

- 천안의 광덕산환경교육센터나 공주의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등은 환경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좋은 곳이다. 노인을 교육할 지도자와 노인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요하다.

## 7. 지원금 사용 내역

(단위 : 원)

항목	내역	소계
회의비(자문비)	5만×4명×6회	1,200,000
재료구입비	종이, 파일 등	12,000
여비(현장 답사비)	3만×4명	120,000
식비 및 다과비	7,000×4명×6회	168,000
합		1,500,000

## 참고자료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평생교육백서」, 2016  
 전라남도, 「전남지역\_평생교육\_실태조사」, 2015  
 충청남도, 「충남 도민 평생교육 요구조사」, 2014  
 충청남도, 「충남평생교육 기초실태 조사」, 2014  
 대전광역시, 「2015 대전시 평생학습실태 조사」, 2015  
 대전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성과집」, 2015  
 부산광역시, 「부산지역평생교육기관운영실태조사연구」, 2015  
 환경부, 「2013 환경백서」, 2013

## [첨부 자료 1]

### <평생교육 전문가-양병찬교수- 인터뷰 자료>

□일시 : 2016년 5월 9일(월) 13시~14:05

□장소 : 공주시

□참석 : 양병찬, 차수철, 김문옥

○ 질문 및 진행 : 차수철

○ 기록 : 김문옥

#### □ 인터뷰

○ 노인은 정의하는 나이(65세)가 적당한가?

- 65세가 UN기준이기는 하다. 직업과 관련해서, 또는 은퇴자의 제2인생이라는 관점도 중요. 중고령자 라는 개념도 있고. 55세(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사업할 때는)

- 일본은 75세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 나이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은퇴와 지역사회진입이 분절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 직장은 지역사회와 연계가 없고. 전통사회에서는 직장과 지역사회가 연결되었는데. 은퇴하면 적응을 못한다. 집에 있거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소일거리 찾는 식의. 노인복지관은 조금 더 약한 개념(동인). 점심먹고 장기 바둑, 탁구 치는 것 등. 쌍용노인복지관의 경우 조금 진화가 있었을 것. 처음에는 초보적인 대 중복지관이었는데, 현재는 충남지역에서도 두드러지는 복지관이기에.

- 노인은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사회경험, 지위, 경제적 등.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을 교육자원화 시키는 역량을 갖춘 분들은 지역사회로 나오지 않았을 것. 교사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 할 거리가 많을 텐데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은 경제적 유인이 없으면 활동이라 생각하지 않음 자원봉사가 문화화 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탈북학생 교육 하는데, 공주대은퇴교수를 쓰고 싶은데 하지 못함. 강의비등 경제적 원인 때문에.

- 노인교육을 받고(노인교육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게 아니라, 자각시키고, 삶의 설계를 하게 하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 노인교육인데) 충남정도 되는 수준은 지금부터 쏟아지고-노인교육 대상자가- 있다. 서울은 50플러스 센터를 만들었다. 은퇴자를 위한 사회 재진입 프로그램이다. 4개 캠퍼스를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다.

0 질문 : 정부정책이나 학술분야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별도 구분이 있다. 군인, 직업, 기업인처럼. 노인은 노인 하나로 통칭되나?

- 그렇다. 미분화되어 있다. 고령자는 본인의 삶과 인생과 연계한 편차가 심하

기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전문직경험자나 고학력자의 특징이 있다. 그분들이 사회에 만나와 있으니까.

- 마케팅 차원에서는 구별하지만, 정책, 사업, 활동은 그런 구분 없이(고학력, 전문직 등 개인적 경험 차이) 하고 있다.

- 지역사회적이나 그분들의 관심, 그분들은 암묵지가 강하기에, 그동안 쓸모 없는 지식이었지만, 잊혀졌던 지식들이 자기에 의해 재창조 되는게 중요한데,

- 현재 공주학 교육부장인데, 공주에서 사업비를 충당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받아, 어르신해설사(이야기꾼, 지역이야기), 지역의 관광루트 개발할 때(골목길 관광루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인이나 눈치 빠른 젊은이들이 상업화 할려는 시기였다. 노인들은 살아있는 박물관, 이런 이야기를 노인들에게 하니까 프라이드를 갖게 됨(학습자에서 전문가로 바뀌니까). 프로그램 좋았고 구현보다는 양성에 노력했음. 사업회 되어야 하는데, 동네사람 로컬지식 등에 대해 값어치를 안 먹이고 있는데, 사회적 공공근로 등과 연결시키면 좋은 지역의 힘이 될 텐데, 그런 게 없다.

-노인은 교육을 통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본 사람. 성인활동시에 지역활동, 지역환경활동 등이 재미 있다고 알아야,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된다

-옛날 미국 속담 : 늙은 개는 훈련받지 못한다. 한 때 노인(평생교육)이 각광 받을 때, 한국은 평생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노인교육센터 이렇게 무슨 필요있냐고 이야기 했다. 훈련받지 못한 노인 보다는 어렸을때, 성인 때부터 계속 교육받게 하고 그 사이 노인교육은 보완적으로 진행되다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복지관, 교육센터 등은 노인만 가는 곳이 아니라, 노인도 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노인을 계속 분리시키는 거다.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는 분리시킬수록 효과가 떨어지며, 비용은 증가한다.

-그런 면에서 지역과, 교육과 복지가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미국은 모든 시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

-독일은 평생교육 중 환경교육과 시민교육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태환경 이라는 콘텐츠가 핵심이고, 평생교육은 프레임을 갖추는 것이기에, 생태가 독립적 공간이 되면 다른 곳에서는 배타적인 공간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अच्छ다.

0 현재 평생교육이 문예교육이 중점인데 어떻게 보시나?

- 편중되어 있다. 문예교육은 어필이 되고 인권적인 요소가 있으니(아직도 문맹자가 감소되지는 않고 있다. 서구는 70년대에 문맹율을 보고 충격을 먹음, 30%가 문맹. 즉 학교가 졸업은 시키지만 학력은 책임 못지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특성화 고등학중에 글은 쓰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것들을 보면 앞으로 계속 그럴 듯 보인다). 현재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다. 평생교육 예산 치고는 많은데(문예교육이).

0 각 노인복지관이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는데(서산, 천안 등등)

- 노인교육과 관련해서는 관심, 취미를 넘어가지 못하는 수준이고. 스스로 자각하고 사회에 발산하는 변화는 없다고 본다

0 노인대상 교육 가이드라인은 있나?

- 없다. 연구부분에서는 정책수준에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류. 서산 한서대학 노인복지과에 한정란 교수가 오랫동안 노인교육을 했으며, 노인교육프로그램으로 논문도 쓰고.( 나랑 싸움...) 노인교육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에, 한번 만나보면 좋을 듯. 현재 가이드라인은 없을 것. 평생교육 측면에서 노인은 ‘우연히 들어온 사람’ 이다. 현재 보면 수강생중에 자기가 가르쳐야 할 사람인데 배우고 있다(서예 등). 이유가 자기 작업공간이 생기고, 사교무대가 되고, 아지트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0 평생교육의 주요 타겟이 없는데 현재 주요 타겟은 무엇?

- 현재 여성 중년 전업주부가 주요 타겟이며, 노인은 그중 일부. 따로 특정해서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은 있지만, 소수이고. 복지나 건강차원이 중심이 되고 있고. 보건소 프로그램 중 확충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 마을 회관 돌면서 건강검진 하면서 레크레이션 등 하는 프로그램인데,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평생교육 예산보다 많다.

0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은 뭘 위한 교육인가?

- 이념적으로는 삶의 질, 경제적 활동, 사회통합 이 평생교육의 목적.

다문화, 민주교육, 노인교육 : 사회통합교육

- 프로그램의 특성으로는 교양, 직업, 사회적교육 이렇게 세가지 이다. 사회적 교육이라는 의미는 격차,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 들이다. 사회적교육이란말은 한국에서는 별로 안쓴다. 서양에서는 ‘소셜러닝’ 이라고 쓴다. 소셜에듀케이션이란 말은 없다. 교육보다는 학습. 사회교육(에듀케이션)은 일본, 우리나라에서 쓰는 개념.

0 노인대상 교육의 방향은 , 바람직한 방향, 프로그램은?

- 세대 프로그램을 늘리면 노인 분들이 개입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겠다. 세대간 연대(3세대, 격세대 등) 프로그램. 일본은 평생학습관이 공민관(우리로 치면

주민자치센터 비슷한, 소속은 교육청이며 교육기관이고 교육전문가가 있다) 우리는 행정이 관할하는데, 거기에는 사회교육주사가 있어서 전문교육코디네이터. (히로시마와 큐슈 사이) 오까야마가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공민관운동 하는 곳(오까야마현 오까야마시) 큰도시이며, ESD 사업이 강하다. UN ESD 사업에 한국이 아주 소외되어 있다. 이재영 교수 책임도 있는 것 같다. 통영 RCE센터 도 거절당했다. 프로그램이 별 볼 일 없다고 일본

애들이.

0 대중적이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 공민관 이야기는, 일본 공민관은 오래되었고 청년학급, 주부학급 등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고령자가 진치고 있는 곳. 공민관이 발달된 곳은 고령화가 더 심각한 곳. 가보면 고령자가 없으면 아이들 생태교육이든, 생활교육이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면에서 어른들의 소일거리든 지혜든(힘을 모으는 것으로서의 실천, 실천 자체가 학습이기에)<sup>1)</sup>

이런 관점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

즉, 단일 기관 속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지역사회네트워크 등) 차원에서 노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복지관, 학교, 중년주부 모임, 교육센터 등등과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며.

노인복지관은 속성이 있다. 전문직 종사자 들은 아직 등지를 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평생교육원(나는 복지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들어온다). 과천 등에서는 복지관에도 다양한 유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재능군들이 포진하기 시작했다).

1. 생태교육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가야하는 것이 하나.

2. 생태교육은 실제 나무를 만지는게 아니라, 그걸로 시를 쓰고, 그림을 쓰고, 제작을 하고 하는 등으로 넘어가야 한다. 수공업화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 수공업이 남아 있다면 유일한 곳이 평생교육관이다. 이것 어떻게 협동조합화 등-이 들의 한계는 개인적인 활동-을 해서 교구화, 상품화 등 해야 한다. 생태교구화 하는 등. 이런 것을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생태교육에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생태교육산업?

-네트워크를 허망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렵기도 하고 네트워크에 걸리는 사업, 예산 등을 잘 걸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 그나마 하는 곳은 광명시 정도(예를 들어 폐지 줍는 할머니가 가르치는 김치교실<sup>2)</sup> 등)

---

1) 사회적 실천은 학습이다(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중의 하나)

-생태환경교육은 평생교육 입장에서, 생태교육은 생애적, 관계지향적, 행위적인 교육이고, 공동의 학습이 요구되고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의 한 평향적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지역사회적이고 실천적이고 공동학습적이고 세대간 교류적이고 이런 측면에서도.

- 오히려 중년여성(어머니부대)를 양성하는 것이 생태운동적, 생태교육자원으로 흡입력도 높고, 아이들 연계가 자동적으로 되기에.

- 개인적 경험 : 지난 주말에 충남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결정한 진로교육 테마가 ‘생태’ 인데,

- 시민교육, 환경교육, 문화교육 등 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데, 평생교육시스템과 어떻게 결합 하는 게(콘텐츠를 평생교육과 결합시키는 것) 관건인데. 각자 따로 논다.

각자의 활동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 교육을 만들어내고 강사양성하고, 동네와 연계하고, 이런 것들.

- 콘텐츠란 생물같은 거라서, 사람 모집부터 시작해서,... 도시별로 마을별로 생태 교육센터랄 지라도 지정하는게 중요. 인적 센터(1인 센터) 등

- 노인은 교육공간으로 들어오는 게 약하다. 복지공간으로 들어와 버리고, 역량 있는 분들은 복지공간이기에 안 들어 오고.

- 한 공간에 여러 전문가가(복지, 교육 등등)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Co-Work이 안된다. 같이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학습자를 데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좋은 콘텐츠를 찾아야 하고. 그런 면에서 광덕산센터나 공주의 환경성질환센터 등 좋은 교육장소이기에 그런 곳들이 거점화 되고, 교육센터로 명명되지 않더라도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자각을 심어주고

0우리사회에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고 자각해야할 기관은 어디인지 조사해 봐야겠다.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이 되겠지만,

0 센터 좀 도와주세요. 센터 기획위원으로 들어오셔.평생교육 전문가 초빙 간담회

---

2) 모든 사람은 가르칠 능력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수원시의 ‘누구나 학교’,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숨은 고수 찾가’ 등



## [첨부 자료 2]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 담당자 인터뷰 내용>

□일시 : 2016년 9월 26일(월) 14시~16:00

□장소 : 홍성군

□참석 : 이병연, 최병조

○ 질문 및 진행 : 이병조

○ 기록 : 최병조

#### □ 인터뷰

##### 1.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 시범사업과 연구사업만을 진행하고 본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다.
- 국가 정책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 도정의 지휘부의 생각과 정책이 영향을 많이 주고 다음으로 요구조사와 시군의 요구가 반영된다.
- 위탁사업을 많이 한다.

##### 2. 기획 의도가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 3.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은?(어떤 사람, 몇 명, 무슨 전공 등

-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주관을 평생교육에서 하고 외부연구자가 참여한 다.
- 참여자의 기본은 교육학과 평생교육을 전공한사람이 참여하고 시군의 요구에 복지내용이 많아져서 복지와 교육학이 섞인다.
-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고 이후에 시군에 갈 때는 수정보완을 해서 한다.

##### 4. 시군구별 평생교육기관 관계(위계)는?

- 위계관계는 아니고 연구협력기관이다. 도청과 시군청의 중간다리역할이다.
- 도청에서 예산을 보낸 것은 감독을 하기는 하지만 시군의 예산이 별도로 있어 위계의 관계는 있다.

- 하지만 도청에 속해있어 약간의 분위기는 있지만 위계는 아니다.

## 5. 수요자 요구 조사, 반영 여부는?

- 수요조사는 설문형태로 한다.
- 시민은 어떻게 구분하는 가 설문지를 조사원이 직접조사를 하고 일부는 공무원이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한다. 공무원이 프로그램의 들어오는 사람들을 설문한다.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조사원은 무작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유지한다.
- 읍면과 군청소재지는 수혜를 받지만 다른 곳은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소, 면사무소들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이뤄지지를 모를 는 경우가 있다. 일부 참여자만 참여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는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있다.
- 참여자가 어떻게 참여했다고 내는 입소문과 주변의 사람들의 소개로 참여한다.

## 6. 노인층(높은 자살률, 질병, 가난 등)에 대한 고려는?

- 보건소쪽에서 하는 것은 있겠지만 평생교육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노인이 많은데 건강하고 활동가능한 분들이 주로 참여한다.
- 복지로 생각해서 접근하지 않는다.

## 7. 집에서 나오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방문교육은?

- 현재는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하지만 7-8명을 배달강좌는 있지만 별다른 것은 없다.
- 경로당정도는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 충남형자치학교는 마을까지 가도록 시군에 위탁을 주고 있다.

## 8. 오락, 단순 활동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문해교육의 거점기관이 됐는데 오락이 사람을 모으기 쉽다.
- 강좌안에 인문학요소를 넣으려고 한다.
- 오락강좌에 약간의 섞음을 시도하고 있다.

- 읍면단위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도 문해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교육도 생각르 하지만 접근을 하지 않음, 다문화는 다문화기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
- 중복지원의 문제로 다문화는 접근이 쉽지 않음

## 9. 지속가능성,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
  - 기초교육에서 시작해서 강사로 활동가능하게까지 가게 하려고 한다.
- 자원봉사센터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 기부자가 있어 교육 신청하고 있다.

## 10. 환경관련(생태, 생활환경 등)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면?

- 그동안에 하지 못했고 올해 하반기에 조금 시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 반영이 될고 시민교육에서 반영되게 하려고 하고, 직접반영을 하지는 못한다.
- 지원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기관이 직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 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안을 받으면 논의나 지원은 가능하다.
- 스스로가 환경을 해치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 11. 평생교육6진 분류의 의미는? 비중의 의미 있는지?

- 육진분류는 반영을 해서 우선은 따라갈려고 한다.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고 실태조사는 경향을 파악하지만, 따라가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
- 단 6개 부분이 고루게 되지는 않지만 시민교육은 낮고 높이려고 생각한다.
- 대상자가 좋아하는 교육으로 가는 곳이 있따.
- 시군은 과나 계로 되어있고 몇곳을 제외하고 자체 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프로그램 운영의 장소성은

## [첨부 자료 3]

### <협동조합 환경교육연구소 발족을 위한 정관안>

## “협동조합 환경교육연구소”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 환경교육연구소(Cooperative Institut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약칭 ‘CIEE’)”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 환경교육연구소(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환경교육과 관련된 연구, 출판,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안심대길 50(우 31220)”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한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신규 가입 여부 결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탈퇴 및 탈퇴 권고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3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3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제3회 납입일자는 제2회 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출자금의 납입은 첫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입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



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사무실사용료

3. 기타 조합 운영 관련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 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 금액의 산정 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

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3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

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대표이사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

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대표이사는 다른 조합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운영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대표이사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



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경기도 수원시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0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집필 및 출판 사업
2. 연구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 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연구 사업
2. 연구 자금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 **부칙**

이 정관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대표 차 수 철 (인)

발기인 최 병 조 (인)

발기인 이 병 연 (인)

발기인 김 문 옥 (인)

발기인 이 재 영 (인)